

한국경제 위기의 본질



온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한국경제호(號)가 흔들리고 있다.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어느 것도 안심할 수 없다. 작년 하반기 이후 급랭한 기업 및 소비자의 체감경기 등을 고려할 때 올 성장률은 작년(6% 안팎)의 절반 정도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올 1월 77%나 감소한 설비투자 와 소비부진, 작년 5월 이후 9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선행지수전년 동월비 등은 이제부터가 경기의 본격 하강국면 진입임을 알려주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붕괴 직전에 있다. 올들어 1, 2월 두달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데다, 지난해 사상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던 서비스수지도 개선될 요인이 없어 경상수지 적자 반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가상승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도 올들어 두달 동안 전년말에 비해 1.2% 포인트나 올라 정책당국의 올 억제 목표 3%안팎은 지키기 어렵게 됐다.

거시경제지표의 '세 마리 토끼'가 동시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제2차 석유파동과 12·6사태의 영향을 받은 80년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다. 외환위기 직후 성장률이 급락하고 물가도 급등했지만 무역수지만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다.

경제불안 심화는 이라크 전쟁 가능성과 세계경제 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가 주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을 대외여건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장잠재력 약화가 문제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설비투자 비율은 96년 152%에서 지난해에는 11%선으로 떨어졌다. 일본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81년 이후 불과 5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차례로 2만불, 3만불의 벽을 깬 그 원동

력이 왕성한 설비투자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소득 1만불이 안되는 우리의 투자위축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수출전선도 험란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시장에서 한국상품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중국의 3분의 1이하로 떨어졌다. 중국을 수출공략 시장으로 삼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장벽을 높이고 자국산 제품에 의한 수입대체 전략을 강화하고 있어 중국을 수출기지로만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대일무역적자가 144억달러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넘은데서 알 수 있듯이 부품·소재의 국산화가 제대로 안돼 자본재의 과도한 수입의존 체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핵심부품의 20%는 '퀄컴칩'이라 한다. 서비스수지 적자는 사상최대치를 경신하며 확대일로에 있다. 해외여행 유학·연수 등이 급증하고 로열티 사용료와 경영컨설팅, 해외광고 등 사업서비스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항구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저축률 하락 지속은 경상수지 흑자기조 붕괴를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

기업의 체질은 어떤가. 외환위기후 기업들은 15배 이상 상승한 원·달러 환율과 절반 이하로 떨어진 금리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그러나 이제는 이 반사이익이 기업을 나약하게 만드는 독이 됐다. 만일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율과 금리가 돌아간다고 가정할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경영자들의 불법·부도덕 행위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주들은 기업이익을 배당으로 돌려 달라고 아우성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뒷전에 미룬채 목전의 과실에만 급급하고 있다. 노조는 노조대로 사측과의 힘겨루기를 격화시키고 있다. 한국경제의 불안감을 반영한 증후군들이 속출하고 있다.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조정한 2월 중순 이후 외국기관투자자들의 셀코리아(주식매도)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도 급감하고 있다. 한국채권에 붙는 리스크프리미엄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북핵문제와 부시 대통령의 대북 군사행동 언급, 미군의 한강 이남 재배치설 등으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북핵 문제 향방은 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근저도 흐트러져 버릴 것이다. 한반도를 불류나 금융, 비즈니스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이 실현되지 못할 것임은 물론이다. 안보가 전제되지 않은 경제안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염려되는 것은 정부의 대응자세다. 총론에서는 상황을 호전시키겠다고 하지만 구체적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 대통령이 "사정속도를 조절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계수사를 지속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 조사라는 칼을 빼들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길들이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